



가상통화 관련 해외법률 및 판례 소개와 시사점

- 미국 · 유럽 · 일본을 중심으로

2017. 9. 20

자본시장연구원

배 승 욱



1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및 판례 소개

2

유럽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 및 판례 소개

3

일본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소개

4

시사점

1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및 판례 소개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개요(1)

○ FinCEN

- › 2013년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침서를 통해 가상통화교환업자 및 관리자에 대해 『통화 및 외환거래보고법』(Bank Secrecy Act)의 적용을 받으며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하도록 함
 - FinCEN 지침상 가상통화를 “일부 환경에서만 통화로 사용되고, 진정한 통화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환수단으로, 특히 가상통화는 어떤 법정관할지역에서도 법정화폐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이라고 정의함

○ CFTC

- › 2015년 9월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침서를 발표하여 상품매매법 Section 1a(9)조의 상품(commodity)의 정의에 가상통화가 포함된다고 발표함
 - CFTC는 가상통화를 “교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보장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기능하지만, 어떤 법정관할지역에서도 법정화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치의 디지털표시”라고 정의함
- › 2017년 7월 CFTC는 LedgerX를 파생상품청산기관(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으로 승인하여 LedgerX에게 담보부(fully-collateralized) 가상통화스왑에 대해 청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
 - LedgerX는 2017년 가을부터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SEC

- › 2014년 5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통화가 폰지사기와 같은 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투자자 경고문을 발표하였지만 가상통화의 정의에 대해 밝히지는 않음
- › 2017년 3월 비트코인 기반의 ETF에 대해 불승인하였고, 현재 비트코인 ETF에 대해 재심중
 - SEC가 ETF를 불승인한 주된 이유는 비트코인이 규제받지 않는 전세계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것임
- › 2017년 7월 SEC는 DAO토큰을 판매하는 행위는 증권이며 연방증권법 규제 대상임을 밝힘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개요(2)

○ OCC

- › 2017년 3월 미국내 은행시스템에 대한 연방규제기관인 통화감독국(OCC)은 핀테크기업이 잠재적으로 가상통화 은행을 만들 수도 있는 특별목적은행업인허가(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규정의 초안을 발표하고 한달 동안 100여 개의 공개의견을 받은 후 현재까지 준비 중에 있음
 - 은행감독자협의회(CSBS)와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은 OCC의 핀테크 은행업 인허가 규정이 기존의 잘 정비된 주법의 규정체계를 무너뜨려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규정임을 밝히고 해당 규정을 철회할 것을 구하는 소를 연방법원에 제기함

○ 뉴욕주의 비트라이센스(BitLicense)

- › 2015년 6월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은 가상통화업자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전성감독규정인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를 제정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최초로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체계를 마련함
 - 가상통화업자는 최저자본금요건, 고객자산분별관리,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프로그램 운영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워싱턴주의 자금송금업법

- › 2017년 7월 워싱턴주 금융감독국(DFI)은 가상통화를 기존의 통일자금서비스법(Uniform Money Services Act) 상 자금송금(Money Transmission) 정의에 "자금과 동등한 가치"(equivalent value)로 포섭시켜 가상통화업자를 자금송금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함
 - 가상통화업자는 DFI로부터 자금송금업자 인허가를 받아 자사시스템에 대한 제3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고객예치금과 동일한 규모의 가상통화준비금을 유지 해야 하고 1만~55만 달러 사이의 보증채권(surety bonds)을 준비해야 함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개요(3)

○ 통일가상통화규제업법

- ▶ 2017년 7월 미국 통일법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이 통과 되어 당국으로부터 인허가 (license)를 받은 가상통화업자만이 가상통화를 교환, 이전,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미국의 통일법위원회에서 제정하는 통일법은 모델법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각주에서 통일법을 기초로 해당 주의 상황에 맞는 주법을 정하는 형식을 취함
 - 가상통화업자는 최저자본금요건, 고객자산분별관리,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프로그램 운영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당국은 주기적으로 가상통화업자의 규정준수를 감독함
 -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가상통화업자에게는 당국은 벌금부과, 면허정지 및 취소, 형사제재를 내릴 수 있음
 - 가상통화업자가 여러 주에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 행정적인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하여 준상호 인정규정(reciprocity provision)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A주에서 면허를 받은 가상통화업자는 이 법을 채택한 B주에서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별도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
- ▶ 소규모 스타트업에 대해 면허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on-ramp"(고속도로 나들목) 규정을 두고 있어, 연거래액이 5,000달러 미만인 가상통화업자는 인허가를 면제해주고, 연거래액이 5,000~35,000달러 미만인 가상통화업자는 임시등록절차(provisional registration process)를 수행하도록 함
 -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의 감면기준금액이 낮다는 의견이 있으며, 면제 기준금액은 15,000달러 미만으로, 임시등록절차 기준금액은 35,000~100,000달러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임시등록의 경우 최저자본금요건 등 대부분의 규제가 기존 면허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스타트업 기업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개요(4)

○ 각 주의 규제 움직임

- 그 밖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법률을 도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다만 텍사스, 캔사스, 캘리포니아, 알라바마, 일리노이, 커네티컷, 뉴햄프셔, 뉴저지, 플로리다, 하와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관련 법안 도입을 논의하고 있음
- 각 주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방향은 다음의 두가지로 분류가능
 - 뉴욕주와 같이 가상통화규제업법을 통해 별도의 법률로 규제를 하는 방식
 - 워싱턴주와 같이 자금서비스업법 상 자금송금에 가상통화를 포섭시켜 규제하는 방식



2017년 미국 가상통화 관련 규제 논의

Certain Key 2017 Developments in Fintech US State Regulation



This material is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at mccarthy.ca



미국의 가상통화 세금 개요

○ 미국국세청(IRS) 가상통화 지침

- 2014년 3월 IRS는 가상통화 관련 지침(IRS Virtual Currency Guidance)을 발표하고 가상통화를 재산(Property)으로 취급하여 과세하기로 함
 - 연방세금목적으로는 가상통화를 외화의 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통화로 취급하지 않음
 -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통화를 수령하는 납세자는 가상통화를 수령한 시점의 공정시장가격(달러)을 기초로 계산함
 - 가상통화를 채굴하였을 경우 채굴일의 공정시장가격(달러)을 기초로 채굴자의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
 - 가상통화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손익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같은 자본자산(Capital Asset)으로 보지만 가상통화업자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이나 기타자산으로 볼 수 있음
 - 가상통화를 이용한 지급결제도 다른 지급결제 수단과 동일한 범위로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의 대상임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가상통화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연방소득세 원천징수(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 FUTA(Federal Unemployment Tax Act) tax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W-2 양식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주법상 소비세(sales tax)

- 미국은 연방차원의 부가가치세(VAT)가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지 않고 각 주법에 따라 소비세(sales tax)를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상통화에 대한 소비세 지침을 발표한 주는 없음



미국 가상통화 관련 판례(Shavers 사건) (1)

- SEC v. Trendon T. Shavers 사건 (비트코인 투자유인행위의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
 - 2014년 9월 18일 텍사스 주법원은 Shavers에 대해 비트코인 투자모집을 통해 70만 비트코인 이상을 사취한 폰지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법원은 Shavers and BTCST에게 4천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과 판결전 이자(disgorgement and prejudgement interest)를 반환할 것을 명하고, 각 피고에게는 15만 달러의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함



미국 가상통화 관련 판례(Shavers 사건) (2)

- 주된 논점으로는 Shavers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그에 대한 수익으로 최대7%의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제공한 투자유인행위가 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는지 여부
 - ▶ Shavers는 비트코인이 금전(Money)이 아니고 법이나 판례에서도 그 성격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규정 상의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
 -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전(Money)을 주고 받지 않았고 단순히 비트코인을 주고 받은 것임을 주장
 - ▶ 이에 대해 법원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그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제공한 행위도 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함
 - 투자계약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①자금의 투자, ②공동기업, ③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의 기대가 필요함
 - 첫째, 비트코인은 명백히 금전(Money)으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쓰일 수 있음, 비록 모든 지역에서 통화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달러, 유로, 엔, 위안 등의 통화와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전(Money)의 한 유형이며 투자자들은 BTCST에 그들의 금전을 투자한 것임
 - 둘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해당유형은 공동기업에 해당함
 - 셋째, 투자자들은 Shavers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였음
 - 따라서 해당 행위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함



미국 가상통화 관련 판례(Espinoza 사건) (1)

○ Florida v. Michel A. Espinoza 사건 (비트코인의 화폐성 부인)

- › 2016년 7월 22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Miami-dade 순회재판관 Teresa Mary Pooler 판사는 32,000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불법유통·자금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Michell Espinoza의 형사사건을 기각함



미국 가상통화 관련 판례(Espinoza 사건) (2)

- Pooler 판사는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으며, 현금이나 금과 같이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길 수 있는 실물자산(tangible wealth)이 아니다”고 하여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아님을 미국 내에서 최초로 판결함
 - 비트코인은 특정의 가치와 교환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으며 일부의 상인들에게 받아들여질 뿐 모든 상인과 서비스제공자에게 사용될 수 없음
 - 가치가 매우 불안정하여 미국 달러의 18배의 가치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의 저장수단인 법정화폐로서는 부적합함
 - 분산원장에 의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앙기관에 의해 담보되는 법정화폐와는 다르다고 주장(학자들은 이러한 높은 변동성이 유동성의 불충분, 미래가치의 불확실, 안정화 방법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봄)
 - 판사도 전문적인 경제학자는 아님을 판결문에서 인정하면서도, 일반인이라면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적시함
 - 다만 장래에 플로리다 법에서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할 수도 있음을 판결문에 적시함
 -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자금이나 지급결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Espinoza가 다음의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 아닌것으로 판시함
 - Espinoza는 ① 불법자금송금업자(unlawful money transmitter)규정 §560.125(5)(a), Fla. Stat. 위반과 ② 자금세탁(money laundering)규정 §896.101(5)(a)와 (5)(b), Fla. Stat. 위반으로써 기소되었지만 2016년 7월 22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Miami-dade 순회재판관 Teresa Mary Pooler 판사에 의해 기각됨



미국 가상통화 관련 판례(Murgio 사건) (1)

○ United States v. Anthony R. Murgio 사건 (비트코인 화폐성을 인정함)

- › 2016년 9월 19일 미국 뉴욕 주 남부지역 연방지방법원 Alison J.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연방자금세탁법규정 위반·무인가 자금송금업체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nthony R. Murgio의 형사사건에서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함
 - 이 판결에서 ① 비트코인이 미국연방법 제18편 제1960조(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 1960) 상의 자금(Funds)인지 여부, ② Coin.mx가 제1960조 상의 자금송금업자(Money Transmitting Business)인지 여부, ③ Coin.mx가 제1960조(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 1960) 상의 인가(Unlicensed)대상인가 여부, ④ Gross가 미국연방법 제18편 제215조(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 215) 상의 금융기관 이사로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판시함



미국 가상통화 관련 판례(Murgio 사건) (2)

- 법원은 ①의 혐의와 관련하여, 제1960조(b)(2)는 금전(money)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금(funds)을 포함하여'라고 표현하여 비트코인이 이 규정상의 자금(funds)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제1960조(b)(2)상의 자금(funds)에 해당됨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시함
 - ▶ 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Taniguchi v. Kan Pac. Saipan, Ltd., 132 S. Ct. 1997, 2002(2012)), 자금(Funds)의 일반적인 의미는 Webster's Dictionary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금전적 자원'(available pecuniary resource)임
 - 여기서, 금전적(pecuniary)이란, '화폐의 형태를 취하거나 화폐로 이루어진'(taking the form of or consisting of money)이며, 금전(money)이란, '일반적으로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 가치척도(measure of value), 지급수단(means of payment)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함
 - "United States v. Faiella, 39 F. Supp. 3d 544, 545(S.D.N.Y. 2014)"판결 및 "United States v. Ulbricht, 31 F. Supp. 3d 540, 570(S.D.N.Y. 2014)"판결과 같이 뉴욕 주 남부지역 연방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자금(funds)과 금전(money)의 정의가 지속적으로 채택되었음
 - 비트코인은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은행계좌에서 직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 자원, 교환수단, 지급수단"이라는 일반적인 화폐(money)의 정의에 해당됨



미국 가상통화 관련 판례(Murgio 사건) (3)

- 위의 판결에 대해, Murgio 측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하였지만 모두 기각됨
 - 첫째, Black's Law Dictionary의 자금(Funds)의 정의는 "특정목적을 위해 모여진 유동자산 또는 금전의 합"(sum of money or other liquid assets establish for a specific purpose)임
 - 둘째, 금전(money)의 정의는 "현금(cash)으로 변환이 쉬운 자산"이며, 좀 더 좁게 정의를 내리면 "통화(currency)의 일부로서 정부에 의해 승인되거나 채택 된 교환수단"임
 - 셋째, Black's Law Dictionary의 정의에 따르면 자금(funds)은 통화(currency)이어야 함
 - 비트코인은 통화로써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으며, "너무 넓게 해석하였거나 무의미하다"(meaningless and overly broad)고 주장함
- 법원은 나머지 ②, ③, ④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함

1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및 판례 소개

2 유럽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 및 판례 소개

3 일본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소개

4 시사점

2

EU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 및 판례소개



EU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1)

- EU 차원에서 가상통화에 관련된 법률은 현존하지 않으며, 다만 EU 자금 세탁방지지침상 가상통화 규제체계 도입여부를 논의 중에 있음
 - EU 위원회는 2016년 7월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Four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Fifth Compromise Text 2016/0208(COD)) 개정안 상에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가상통화업자와 가상통화지갑제공업자에게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함
 - 가상통화란 “중앙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발행하지 않은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표시로서, 법정화폐와 같지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수단으로써 받아들여지며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거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가상통화거래업자란 “가상통화와 법정화폐간의 교환서비스에 업으로써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 가상통화지갑제공업자란 “가상통화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보관해주는 서비스제공업자”를 의미함



EU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2)

- 최근 2017년 7월 11일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 개정안(2016/0208(OLP))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최종 통과 되지는 못함
- 다만 EU가 제안한 자금세탁방지법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Jerry Brito)
 - › 가상통화지갑제공업자가 고객으로부터 2개 또는 3개 이상의 주소에 대해 1개의 개인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를 가상통화지갑제공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 › 개인키를 보유하는 모든자에게 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어디까지를 가상통화지갑제공업자로 보아야 할지 등의 불분명한 문제들이 존재함



독일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 2013년 8월 전세계 최초로 독일의 BaFin은 가상통화를 독일은행법 (German Banking Act) 상의 계정단위(units of account)로 보아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으로 취급함
 - › 다만 독일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정의에는 외환(foreign exchange)과 계정단위(units of account) 등도 포함되어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상품과 단순한 비교는 어려움
 -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독일지급서비스감독법(German Payment Service Supervision Act) 상의 전자화폐(e-money)도 아님
 - › 가상통화는 외환 또는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대체통화와 유사하며 물물교환(barter transactions)의 사적 지급수단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봄
- 가상통화교환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BaFin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함
 - › 초기자본금 730,000 유로이상,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경영진 보유, 감독기관 보고의무 등의 요건을 가짐
 - › 단순히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써 현금이나 예금통화를 대신하여 가상통화를 사용한 것은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법상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EU사법재판소 가상통화 판례(Hedqvist 사건)(1)

- EU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는 Hedqvist 청구에 대해 2015년 10월 22일 EU부가가치세지침상 비트코인이 통화관련 면세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함
 - ▶ Mr. Hedqvist는 본인 소유의 회사를 통해 비트코인과 기존의 통화 사이에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비트코인의 매매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여야 되는지를 결정해 줄 것을 해당국의 소득법제위원회에 요청하였고, 2013년 10월 14일 소득법제위원회는 시카고제일은행의 판결(C-172/96, EU:C:1998:354)의 판시를 기초로 피고가 스웨덴 부가가치세법 제3장 제9항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인정함
 - ▶ 그러나 스웨덴 국세청은 소득법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재판소에 항소하여, Hedqvist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이 스웨덴 부가가치세법 제3장 제9항에 의거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 이에 Hedqvist는 스웨덴 국세청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며 소득법제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U사법재판소 가상통화 판례(Hedqvist 사건)(2)

- 스웨덴 최고행정재판소는 소송절차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첫째, 기존의 통화와 비트코인 간의 교환이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둘째 이 교환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대해 EU사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EU사법재판소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시를 내림
 - 첫째, 기존의 통화를 가상통화로 교환(그 반대의 교환도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지침 제2조 제1항의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하며 따라서 Hedqvist의 가상통화거래업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 둘째, 만약 해당거래가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이 교환거래가 부가가치세 지침의 제135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지침 제135조 제1항 (e)에 명시된 면제 조항에 통화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135조, "(1) 회원국은 다음의 거래를 면제 한다 ... (e) 통화, 법정화폐로 사용되는 동전, 은행권(bank note) 간의 거래(단, 단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금, 은, 그 밖의 다른 금속 동전 또는 지폐(보통 법정화폐나 화폐의 이익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는 제외함), ..."
 - 단, 이번 판결은 EU사법재판소가 비트코인의 부가가치세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법적인 입장에서 판시한 것으로 비트코인이 통화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판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1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및 판례 소개

2

유럽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 및 판례 소개

3

일본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소개

4

시사점

3

일본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소개



일본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시행

- 2016년 5월 25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하는 규제를 담은 자금결제법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 후인 2017년 4월 1일 시행됨
 - ▶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법적정의를 명확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를 규제할 법률도 존재하지 않았음
 - 그러나 가상통화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에 사용 될 위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마운틴 곱스(Mt. Gox) 비트코인교환소가 파산함에 따라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자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
 - ▶ 일본 국·내외 상황을 근거로 2015년 하반기부터 금융심의회 “결제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 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자금결제법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하여 가상통화에 관한 규제를 하는 법률안(“情報通信技術の進展等の環境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2016년 3월 4일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음
 - ▶ 다만 이번 개정법이 가상통화를 일본의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재산적 가치로 정의내린 점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음



일본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 관련 주요내용(1)

○ “가상통화”란 다음을 의미함(仮想通貨の定義) (2조 5항)

- ① 물품구매·대여·용역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대가의 변제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다수에게 매수 및 매도를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또는 그 외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 함, 본국통화·외국통화·통화표시 자산을 제외함, 다음 호에서도 동일)이면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 ② 불특정다수에게 ①의 가상화폐로 상호교환을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이면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 “가상통화교환업”이란 다음을 의미함(仮想通貨交換業の定義) (2조 7항)

- ① 가상통화의 매매 또는 다른 가상통화로의 교환, ② ①의 중개 또는 대리, ③ ①, ②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서, 소비자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를 관리하는 업 중 하나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함



일본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 관련 주요내용(2)

가상통화교환업에 관한 등록제 도입(仮想通貨交換業に係る登録制の導入)

- ▶ 가상통화교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함(63조의 2)
 - 등록받은 자를 “가상통화교환업자”(2조 8항)라 하며 또한 “외국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해서도 위의 등록이 필요함
 - 등록받지 않은 외국가상통화교환업체가 국내에 있는 자에게 2조 7항 ① 내지 ③의 행위를 권유하는 것은 명문으로 금지됨(63조의 22)
- ▶ 등록신청서에 가상통화의 명칭, 가상통화교환업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 거부사유가 없다는 것을 서약하는 서류·재무에 관한 서류·가상통화교환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체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음(63조의 3)
- ▶ 등록사업자에 대해서 이를 기재한 “가상통화교환업자등록부”를 공표함(63조의 4)
- ▶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등록거부사유가 열거되어 있음(63조의 5)
 - 주식회사 또는 외국가상통화교환업자(국내에 영업소를 가진 외국회사에 한함)가 아닌 경우
 - 외국가상통화교환업자가 일본에서 대표자(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에 한함)가 없는 법인
 - 가상통화교환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천만엔)에 적합한 재산적 기초를 갖지 않는 법인
 - 가상통화교환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진행되지 않는 법인 등



일본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 관련 주요내용(3)

가상통화교환업자 업무에 관한 규제(仮想通貨交換業者の業務に関する規制)

- ① 정보보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63조의 8)
- ②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와 적정하고 확실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63조의 10)
- ③ 소비자의 재산을 자기재산으로부터 분별관리하고, 관리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63조의 11)
- ④ 소비자와의 분쟁해결 처리를 위해 지정된 분쟁해결기관과 업무체결 계약을 맺어야 하며 만약 분쟁해결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원처리장치 및 분쟁해결조치를 해야 함(63조의 12)
 - 소비자와의 분쟁해결을 원칙적으로 금융 ADR에 의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향후 내각 부령에서 정함



일본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 관련 주요내용(4)

○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감독(仮想通貨交換業者に対する監督)

- ① 내각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야 함(63조의 13)
- ② 사업연도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함(63조의 14 제1항)
 - 이 보고서는 재무에 관한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 감사보고서 및 그 밖에 내각 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63조의 14 제3항)
- ③ 소비자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를 관리 할 때는 ②의 보고서 외에 내각 부령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소비자 예치금의 액수·가상통화의 수량·기타 이들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함(63조의 14 제2항)
 - 이 보고서에는 소비자의 금전 액수·가상통화의 수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기타의 내각 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63조의 14 제4항)



일본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 관련 주요내용(5)

- ④ 내각총리대신은 가상통화교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음(63조의 15 제1항)
 - 첫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 둘째, 영업소 및 기타시설 방문
 - 셋째, 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관한 질문 및 장부·서류·기타물건의 검사
- ⑤ 내각총리대신은 가상통화교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하는 데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필요한도에서 해당 가상통화교환업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재위탁, 재재위탁포함)에 대해서도 ④의 조치를 할 수 있음(63조의 15 제2항)
- ⑥ 내각총리대신은 가상통화교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필요한도에서 업무운영·재산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및 기타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63조의 16)
- ⑦ 내각총리대신은 가상통화교환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상통화교환업의 영업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음(63조의 17)
 - 해당 처분을 한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함



일본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 관련 주요내용(6)

- 가상통화교환업자가 설립하는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관한 규정(仮想通貨交換業者の設立する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に関する規定)
 - › 가상통화교환업자는 회원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를 임의로 설립할 수 있음
 - 이 사업자단체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임
 - 기존 자금결제법상의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관한 규정이 가상통화교환업자가 설립하는 사업자단체에도 적용됨(87조, 88조, 90조 92조, 97조)



일본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 관련 주요내용(7)

-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처벌(仮想通貨交換業者に対する罰則): 자금결제법의 기존 벌칙규정이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됨(107~109조, 112~117조)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벌규정(107조)
 - 무등록으로 가상통화교환업을 영위하는 자·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한자·명의대여자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벌규정(108조)
 - 63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금전·가상통화의 분별관리의무위반, 63조의 1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상통화교환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 위반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벌규정(109조)
 - 63조의 20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것(1호), 63조의 13에 의한 장부서류 작성·보존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의 장부서류작성(4호), 63조의 14에 의한 보고서·첨부서류의 미제출, 허위 기재(5호), 63조의 15에 의한 보고자료 미제출·허위보고·허위자료제출(6호), 63조의 15에 의한 답변거부·허위답변·검사거부·검사방해·검사가피(7호)
 - ④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벌규정(112조)
 - 6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허위 기재
 - ⑤ 100만엔 이하의 벌금(113조)
 - 63조의 16의 규정에 의한 업무개선명령위반



일본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주요내용

- 가상통화교환업자를 특정사업자로 지정(仮想通貨交換業者の「特定事業者」への指定)
 - 가상통화교환업자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의무를 지는 특정사업자에 추가함(2조 31호)
- 이용자·가상통화교환업자 등에 대한 벌칙(利用者・仮想通貨交換業者等に対する罰則)
 - ① 본인확인 의무(4조), ② 확인기록 작성·보존 의무(6조), ③ 거래기록 작성·보존 의무(7조), ④ 의심스러운 거래의 당국에 신고 의무(8조), ⑤ 거래 시 확인 등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10조) 등 이 법에 규정되는 의무를 부과함



일본의 가상통화 세금 개요

- 2017년 7월 1일부터 일본내의 가상통화의 이전에 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됨
 - › 다만 가상통화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통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세를 부과함
- 가상통화는 물품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가상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
 - › 가상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중 잡소득으로 구분됨



1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및 판례 소개

2

유럽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 및 판례 소개

3

일본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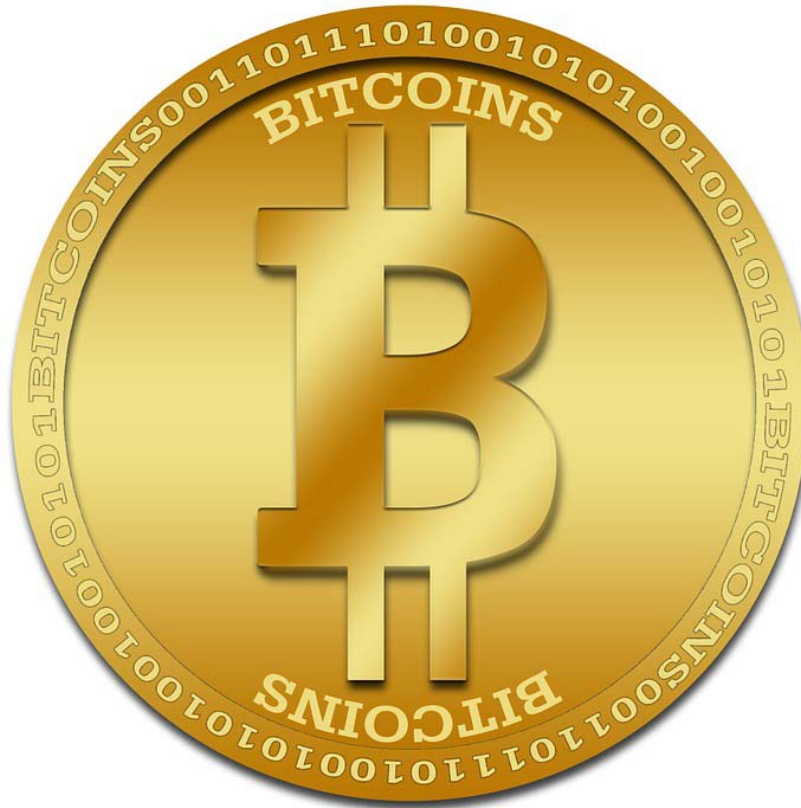
4

시사점

4

종합 및 시사점

종합 및 시사점





Thank You!